

李정부 첫 추경 국회 통과 “국민 삶 책임지겠다는 의지”

민주 도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벼랑 끝 몰린 민생 현장 살릴 최소한이 장치”
정부 추경, 소비쿠폰 비롯 예술강사 인건비 등 국민생활 밀접 예산 포함돼

이재명 정부가 제출한 첫 추가경정 예산안(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이원택) 김슬지 수석대변인은 5일 발표한 입정문에서 “이번 추경은 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회복의 시작이며, 국민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한 달 만인 지난 4일,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으며, 5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빠른 추경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추경에는 △12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공공 비축 확대 △고수은 양식장 장비 지원 △산불 피해 복구 △영유아 및 장애인 돌봄 지원 △예술강사 인건비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포함됐다.

특히 국민 1인당 15만 원에서 최대 55만 원까지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소비쿠폰은 벼랑 끝에 몰린 민생 현장을 살릴 최소한의 장치”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추경 심사 과정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특수활동비 등 민생과 무관한 사안을 이유로 심사에 불참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이 계엄령 기도와 민생 파탄으로 나라를 위기에 몰아넣은 책임을 국민의힘은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이번 추경은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국민주권 정부의 방향에 맞춰 도민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국정기획위원회 찾은 김민석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회의에 참석한 위원들과 만나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정부청사 사진기자단 제공〉

‘명품 있어도 세금은 안낸다? 안될일’

전북자치도, 고액체납자 정조준... 올 상반기 기준 총 8억원 이상 체납액 환수

전북자치도가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소득 고액체납자에 대해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하며 상반기 기준 총 8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환수하며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상반기 동안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대상으로 급여압류 등 ‘특별관리’에 착수, 총 17억7,300만원의 급여를 압류하고 이 중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또한 고의적 납세 회피가 의심되는 고액체납자 46명을 상대로 가택수색을 실시한 결과, 1억4,6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명품 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가 동산 423건을 압류했다. 이는 전

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로, 현장 중심의 징수활동이 실효성을 입증한 사례로 평가된다.

압류 대상 품목 중에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의 시계 및 가방, 다량의 귀금속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징수 과정에서도 어려움은 적지 않았다. 일부 체납자는 출입을 거부하거나, 고의적으로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있어 현장 대응 과정에서 법적·물리적 저항이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압류 물품 중 상당수는 보관 비용 부담이 크거나 시장성 부족으로 공개 실적이 낮아 환수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따라 도는 실효적 징수 확대를

위해 환가성이 높은 명품 시계와 귀금속 등 주요 압류 동산을 오는 9월, ‘온비드(웹포드 공개포털시스템)’와 전북도청 청사 내 전시를 병행해 공개 매각할 예정이다.

이번 매각은 민간 수요를 유도하고 별도 위탁 수수료 없이 전북자치도가 직접 절차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행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김종철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세금을 체납하면서도 명품을 소지한 채 납세를 회피하는 고소득층 사례는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세금을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부터 자산매각까지 강력 대응해 공정한 납세문화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이름뿐인 특별자치도는 안된다... 대통령 결단으로 전북에 실질 권한을”

혁신당 전북자치도당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칭만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지원은 제자리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7일 논평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실질 자치 실현을 위한 제도 보완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성수 조국혁신당 전북도당 정책실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특별한 권한 없이 단지 이름만 바뀐 상태”라며 “기존 광역자치단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권한과 재정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지역별 가중치 반영 예산’과 ‘수도권 일극 체제의 전면 전환’ 정책을 언급하며, 이 같은 철학을 제도적으로 가장 먼저 적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전북특별자치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대전에서 열린 대통령 타운홀미팅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지역 형평성을 강조했지만, 충청권의 반발에서도 드러났듯이 앞으로 지역 간 경쟁과 긴장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전북은 새만금 RE100 국가산단 조성, 농생명 산업 구조 전환 등 국가적 차원의 지원 없이는 풀기 어려운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이다. 박 실장은 “이런 점에서 전북은 ‘차별 없는 지역, 균형 있는 국가’라는 국정철학을 실현할 첫 시험대”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실질적인 특별자치 실현을 위해 △예산 편성 시 지방비 부담 완화 특별도입 △공공기관 우선 배치를 위한 별도 기준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의 유연화 및 지역성 반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대통령의 구상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실이 되려면, 국정기획위원회를 포함한 정책 설계 단계에서 전북형 특별 권한이 명확하게 제도화돼야 한다”며 실천적 조치를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 AI 산업 중심지 도약 발판 마련”

민주 정동영 의원, 전북 ‘피지컬 AI’ 예산 확보
전주·완주 중심으로 미래형 AI 인프라 구축

더불어민주당 정동영 의원(전주병)이 전북 지역에 투입될 ‘피지컬 AI 핵심기술 실증(PoC) 사업’ 예산 229억원을 확보했다.



해당 예산은 2025년도 제2차 추경예산안에 증액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에서 제외됐던 이 예산은 정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와 과기부, 여야 예결위 의원들을 설득하며 증액을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로 평가된다.

“피지컬AI PoC사업”은 로봇, 센서, 디지털트윈 등 물리적 인공지능 기술을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실증사업으로,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미래형 AI 인프라를 구축하게 된다.

총 사업비는 382억원 규모로, 국비 229억원 외에도 지방비와 민자 153억원이 투입된다.

사업에는 현대차, 네이버, 카이스트, 전북대, 전북특별자치도 등 민·관·학이 함께 참여해 실증 플랫폼, 기술검증 랩, 의료·제조 실증공간 등을 구축하고 국산 AI 기술 기반의 기술주권 확보를 추진한다.

정동영 의원은 “AI는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핵심이자 국가전략예산”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로 전북이 피지컬AI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2030년까지 1조원 규모로 사업을 확대해 전북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건설사업 ‘속도’

〈부여~익산〉

민주 이춘석 의원, 추경예산 120억원 확보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구간 토지보상이 연내 완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익산갑)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부여~익산) 보상비 120억원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경기 광택시와 전북 익산시를 잇는 총 137.4km의 국내 최장 길이 민자고속도로로 ‘서해안 제2대동맥’으로 불렸다. 그러나 국토부가 사업 구간을 1단계(광택~부여) 충청권과 2단계(부여~익산) 호남권으로 나눠서 추진하면서 전북정착권과 도민들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94km에 달하는 1단계 사업은 2019년에 착공했으나, 고작 43.4km밖에 되지 않는 2단계 사업은 10년 뒤인 2029년에 착공하도록 분리착공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에 2019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던 이춘석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1~2단계 사업 구간에 대한 동시보상을 확보받은 바 있다. 그러나 1단계 사업의 경우 2024년 12월 준공됐으나, 2단계 사업의 경우 토지보상조차 완료되지 못한 실정이다.

결국, 부여에서 끊어져 버린 서부내륙 고속도로는 ‘전북 홀대’의 상징으로 여겨져 왔다.

제22대 국회에 다시 돌아온 이춘석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토부를 상대로 서부내륙 고속도로 2단계 사업이 늦어진 경위를 따져 묻고, 조기착공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익산지역 공약에 포함시킨 것은 물론이고, 이번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백방으로 노력했다. 한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서부내륙 고속도로 예산이 전액 보상비라는 이유에서 삭감될 위기에 처했으나, 이춘석 의원이 예결위원들과 긴밀히 협력해 막아냈다는 후문이다.

이춘석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서는 우리 전북이 홀대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지금은 부여에서 멈춰있던 서부내륙 고속도로를 조기 개통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국정 반영 핵심사업 철저히”

정현을 익산시장

“기회는 준비된 도시에게만 의미가 있습니다.”

정현을 익산시장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 가동에 발맞춰 지역 핵심사업의 철저한 관리와 전략적 대응을 주문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7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방향을 확정짓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익산시의 핵심사업이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 부서가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 시장은 특히 “이미 추진 중인 주요 사업과 신규로 발굴한 핵심과제들이 중앙정부 정책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라”며 “중앙부처와의 소통은 물론, 정책자료 준비와 대응논리 마련에도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왕궁자연환경복원사업 △익산역 광역환승체계 구축 등 지역의 미래를 견인할 11개 과제를 전략적으로 관리해 왔다.

시는 앞으로도 관련 부서별로 사업 타당성 확보와 부처 협의, 정치권 공조 등을 통해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정 시장은 “지역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시점인 만큼, 모든 공무원이 책임감을 갖고 정부와의 정책 연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이재준 기자

새만금공사, 수변도시 교량 거더 거치작업 안전활동

새만금개발공사(사장 나경균)는 수변도시 조성공사 현장에서 시행된 교량 거더 거치 작업에 따라 임원진 주관의 안전활동을 시행했다.

이번 공정은 크레인 등 대형 건설기계와 중량물 작업 등 고위험 공종으로 작업환경 확보와 운반 주의, 철저한 사전 동선 확인 등이 요구된다.

이에, 크레인 작업반경 확보를 위한 추가공사를 시행하고, 거더 이동 시 전도방지를 위해 충분한 지지력 확보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3D 모델 기반 BIM 시뮬레이션을 통한 장비 이동 동선 최적화 등 다양한 입체적 활동을 통해 안전성을 강화했다.

/이만호 기자

내일 윤석열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가를 구속영장심사심사가 오는 9일 열린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지 낙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9일 오후 2시 15분 법원 서관 321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직관남용 관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받아야 할 수사 및 재판, 이에 따른 법집행 등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민주 윤준병 의원, 불법조업 피해지원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정읍·고창)은 7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추징금과 담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 돈은 피해 어민과는 무관하게 일반회계로 귀속되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징수된 자금을 수산발전기금으로 전환해 실제 피해 어민과 피해지역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어업 담보금 피해어업인 지원법’을 마련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이 부과한 담보금은 2,300억원을 넘지만, 피해 어민을 위한 직접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윤 의원은 “불법조업이 반복되면서 국내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담보금을 활용해 어업인의 생계와 국제 어업질서 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수 도의원,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더불어민주당)이 제419회 정례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조례안’을 발의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이다.

이번 조례안은 △증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예산제도의 이해와 실무 역량 강화를 위한 지침서를 마련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 후 도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또한, △실효성 향상을 위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도민이 예산제 운영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하며,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가 이루어지도록 했다.

이번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하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